

전남도, ‘글로벌대학30 지정’ 막바지 준비 총력

20일 본지정 현장 대면 평가 목포대·동신대연합 심사준비 인구감소·청년유출 해소 방안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주력

전남도가 2024년 글로벌대학30 공모의 마지막 단계인 본지정 대면평가 심사가 오는 20일로 예정됨에 따라 국립목포대, 동신대연합과 함께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대 글로벌대학 지정 쾌거에 이어 더 치열해진 올해 지정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 발표 전부터 대학 대상 설명회 개최, 예비

신청을 위한 혁신기획서 작성 지원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국립목포대와 동신대연합, 2개 지역대학이 글로벌대학30으로 예비지정됐다.

이와 더불어 모든 실국 및 출연기관과 함께 글로벌대학 전담 지원 조직인 ‘대학협력TF’를 본격 가동해 대학 역할을 보장할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집중 지원에도 나섰다. 이 가운데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인 실행계획서 작성반은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 특화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국립목포대, 동신대와 함께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글로벌대학 발대식을 공동 개최해 대

학-지자체-산업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지역 대학 육성 의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일 치러질 현장 대면평가 심사에서 대학별 비전과 지자체 지원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학 측과 공동으로 준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 및 청년 유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정주형 청년을 키울 글로벌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해당 공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순천대 글로벌대학 지정에 도움을 주며 선정 결실을

봤다. 이후에도 지자체 최초로 ‘지산학 협력실’을 대학에 설치,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적극 지원해 글로벌사업을 신속하게 정착시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사업 추진에도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지방소멸을 막고 미래 100년에 대비하기 위해 인재육성교육국을 신설하고 라이즈(RISE),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인 글로벌대학에 도내 대학 2곳

모두 최종 선정되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교육부 단일 공모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 30개를 2026년까지 선정해 1000억(단독·연합)~1500억 원(통합)의 국비와 함께 규제개혁 등 대학 내외부 혁신을 지원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라이즈(RISE) 체계의 선도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올해 글로벌대학30 공모에는 20곳의 예비지정 지역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오는 20일 대면평가를 거쳐 9월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농촌 돌봄서비스사업 추진

8개 시군 9800여명 대상

전남도는 사회적 농업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9800여 명에게 농촌 체험, 생필품 배달, 생활 불편 개선,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농촌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돌봄서비스는 농업·농촌 복지 증진과 교육·문화·돌봄 등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남 8개 시군, 16개 법인·단체에서 농촌돌봄농장이나 주민생활돌봄사업을 통해 농촌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농촌돌봄농장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활동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실제 순천 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 고흥 생태농원소향, 장성 농업회사법인(주)흥보리와 옐로우창농(주) 등에서 직업재활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나주 명하썬빛협동조합, 고흥 와포햇살영농조합법

인, 장성 드림공동체영농조합법인 등에서 학교, 지역 시설과 연계한 농촌활동,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과 학교박청소년, 시설이 용청소년 등에게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민생활돌봄은 주민과 서비스 제공 기관,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공유농장, 농촌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배달, 집수리,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곡성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과 석곡청년팜파레협동조합, 해남 줌소리협동조합과 꽃메협동조합, 영광 깨움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 진도 사회적협동조합남도함께 등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회적 농업활동 확산을 위해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 순천과 영광에서 현장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데이터 분석으로 폭염 취약계층 지킨다

광주시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늘막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 105곳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폭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그늘막 설치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 10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역별 열분포도’와 그늘막 설치 현황, 신호기·횡단보도 설치 현황, 지역별 폭염 취약계층(어린이·노인) 거주 및 유동인구 현황 등을 종합 분석했다.

지역별로 100m 단위의 격자형 전자지도도를 생성하고, 격자 내 노인·어린이 거주인구와 유동인구수, 지표면온도 등을 지수화해 기존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그동안 그늘막 설치의 자치구가 다중이용장소 위치, 그늘막 설치요구민원, 현장여건 등을 바탕으로 위치를 결정했다. 하

지만,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표면온도와 폭염취약계층 거주, 유동인구까지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최적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출된 그늘막 설치 후보지역은 5개 자치구 담당자가 현장방문 후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지침에 따라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2025년 그늘막 설치 예산을 신청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와 함께 도로 살수차량의 노선을 폭염취약계층 거주 및 유동인구지수, 온도지수 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613개이며, 도로 살수차량은 최대 16대로 하루평균 400km를 운행하고 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 그늘막 설치입지 데이터 분석이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조선대병원 입구에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 환자 4주만에 18배 증가

이달 2주차 입원환자 55명 시, 종합예방대책 마련 나서

광주지역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5개소)의 8월 2주 입원환자는 55명으로, 4주전 3명에 비해 18배 늘었다.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69.1%(38명)로, 7월 4주부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19~49세 16.3%(9명), 50~64세 12.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염취약시설내 집단 발병 예방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자치구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 건

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6주간의 광주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공유하고 △시·자치구별 감염병 대응인력 등 체계 정비 △요양시설 등 지역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재점검 및 관리 강화방안 논의 △먹는 치료제 수급관리상황 점검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지속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우선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기관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비롯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10명 이상)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구축한 전담대응팀(시·구 32개팀 92명)과 대응절차를 재점검했다.

또 자치구별 감염병관리 부서와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가 협력해 집단발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시설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집단발생 후에는 현장점검 대조표를 활용, 발생현황 파악과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수급과 관련해 지역 내 추가수요에 대해서는 보건소별 안전물량 전환배치로 신속히 대응하고, 의·약사회, 보건소·조제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등 치료제 수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광주 표본감시기관(5개소) 최근 6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광주의 경우 △7월 2주 3명△7월 3주 3명 △7월 4주 18명 △8월 1주 48명 △8월 2주 55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

집행률 68.2%…인센티브 1억5천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

으로 5개 그룹(광역시·도와 기초시·군·자치구)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요 평가 기준은 상반기 중 지자체별 신속집행 목표달성도와 광역·기초 간 협력도 등이다.

전남도는 상반기까지 집행 대상액 8조 5218억원 가운데 5조 8145억원을 집행해 68.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행안

부가 광역 단위 지자체에 제시한 목표치인 64.4%를 3.8%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투자사업 분야에 신속집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 지급되는 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오지현 기자